

다산포럼



이기영
초록교육연대 공동대표
호서대 명예교수

한국의 천주교는 교조적 통치로 부패한 조선을 개혁 하려는 남인 사립과 학자들에 의해 세계 역사상 유례없이 자생적으로 탄생했다. 남인 사립과 선비들이 청나라를 통해 들어온 서구의 과학문명을 눈을 뜨면서 만민 평등과 사랑을 담은 천주학을 접하고 이를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과정에서 천주교회화가 만들어진 것이다. 지난해 11월 말 개봉한 영화 '탄생'은 한국 최초의 사제 김대건(1821-1846, 세례명: 안드레아)의 목숨을 건 개혁, 즉 의(義)를 향한 탐험적 발자취를 조명하는 영화다. 김대건을 김경주의 대동여지도(1861년)에 16년 앞서, 서울(Seoul)을 포함하는 조선의 지명을 처음으로 영문자로 기록된 지도인 조선전도(1845년)를 제작하는 등의 근대화 활동을 한 선구자로 그렸다. 만일 그때 조선이 당시 세도정치에 굴복하지 않고 영어·프랑스어·라틴어·중국어·스페인어 등 5개 언어를 구사할 뿐 아니라 지리학·조선학·측량학 등 다양한 학문을 습득한 김대건을 살려 개혁 개방의 길로 나갔다면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근대화의 길로 나아갈 수 있지 않았을까?
며칠 전 가족이 다 함께,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사제인 김대건 신부의 사제가 되기 위한 탐험을 그린 영화 '탄생'을 관람했다. 김대건 신부는 1821년 충남 당진에서 태어나 1845년 사제 서품을 받은 지 겨우 1년 만에 스물다섯의 나이로 한강 변 새남터에서 순교했

'탄생' 김대건 신부와 흥익 자연 정신

다. 세도정치의 폐해로 어지럽혀진 조선 조정은 아편 전쟁으로 중국이 힘이 무너지자 국제정세도 모른 채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때문에 어린 현종은 국제 정세와 서학을 아는 인물이 필요했지만, 외환을 부를 수 있는 김대건이란 존재를 하루라도 빨리 없애야 한다는 신하들의 집단 항명으로, 김대건의 참수를 막지 못했다.
다산 정약용은 23세 때인 1784년 큰형수 제사를 위해 고향 마재에 갔다가 돌아오는 배 안에서 큰형수의 동생인 이벽으로부터 천주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천주교 관련 서적을 건네받아 연구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한국의 가톨릭은 서양 제국에서 보낸 선교사가 아니라 청나라를 오가던 사신과 역관들에 의해 자생적으로 태어난 것이다. 그러나 갑작스런 정조의 죽음 이후, 노론 벽파가 세력을 잡자 남인들을 몰아내기 위한 1801년 신유박해에 이어, 1839년에는 기해사옥으로 앵베르 주교 이하 모방, 샤스탕 등 세 신부가 체포되어 참수되었다. 박해 전 모방 신부는 성직자 없이 미사를 드린다는 것이 교회법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신자들에게 알리고 한국인 사제를 양성하기 위해 청년 세 명을 마카오로 보냈는데, 이들 중 김대건이 제일 먼저 1845년 상해 감자항 성당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다. 그는 배를 타고 비밀리에 입국해 선교 활동의 일환으로 백령도에서 외국 선교사들을 입국시키기 위한 배팅을 개척하다가 잡혀 새남터에서 군문효수형을 받는다.
그러나 아무리 쇠국정적으로 일관해도 근대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의 흐름이었다. 천주교가 자생적으로 탄생한 조선의 사상적 토양은 권력을 통한 사리사욕을 쫓기보다는 자연의 순리에 따라 백성을 존중하고 겸손하게 사는 풍류도 선비들의 의(義)로움에 있다고 생각된다. 이는 자연철학에 기반한 순리적 평등사상으로 우리 민족의 수천 년 역사를 관통해 온 흥익인간 정신

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흥익인간 정신은, 생육신 김시습에게 선비정신을 이어준 신라대 천재인 최치원의 풍류에도 나타나 있으며, 최근 재야사학자들의 큰 관심사인 '천부경'(天符經)적 세계관이 그 기원으로 생각된다.
정조가 등용한 남인 사립과 선비들이 꾸민 백성을 소중히 받드는 흥익인간 정신은 이미 징심록과 금칙으로 예약의 정치를 펼친 세종대에서 잠시 꽃을 피웠으나 이어지지 못하고 단종을 죽이고 왕좌를 차지한 세조의 탄압으로 산속으로 숨어들었다. 그러나 생태적 가치를 지닌 '한사상'의 민주주의 DNA는 여전히 우리 민족의 핏줄 속에 남아 동학 및 3·1운동을 통해서 이어졌고 근대에 이르러서는 4·19, 5·18을 거쳐 세계적 이목을 끈 촛불 시민운동으로 귀결되었다고 사료된다.
이젠 대학의 사학자들도 주변 강대국이 손낼 수 있었던 식민 사관 사료 들을 실증 사료로 인정하는 것에서 벗어나 겨레의 혼을 지키기 위한 일념으로 목숨을 걸고 민간에 숨겨져 전해져 내려온 희귀한 고대 사료들을 함부로 위서라 치부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근원적인 연구를 시작해 그 심오한 철학적 가치부터 재평가해야 한다.
흥익인간 정신은 바로 자연이 인간과 한 몸이니 자연을 본받아 자연을 파괴하는 과도한 물질 소유 추구, 즉 탐욕을 버리고 자연스럽게 순리대로 서로 필요한 만큼 나누며 살자는 유기 생태론적 쌍무적 민주주의 사상이다. 그리고 흥익자연 정신은 인간은 물론 모든 자연 만물을 이롭게 하자는 정신으로, K-스피릿(K-spirit)으로 정의해 보자. 국내외에서 정치, 경제, 환경, 국제 관계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문제점과 갈등이 노정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 K-스피릿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남북한은 물론 전 세계인들과 공유해 기구 위기 극복에 앞장서며 위기의 인류 문명을 선도하자.

기고

고향사랑기부제 성공 열쇠는 '상생'



임택
광주 동구청장

과본은 16.5%의 세액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렇게 모인 기부금은 사회 취약계층 지원 및 청소년 육상·보호, 지역민 복리 증진 등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
일본은 올해도 '후후사토 납세제도'(고향세)를 시행한 지 15년째 접어들었다. 2008년 당시 시행 초기에만 해도 기부금은 81억 엔(한화 778억 원)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모인 기부금만 8302억 4000만 엔(한화 8조 900억 원)에 달했다. 제도 시행 10여 년 만에 기부액의 100배를 넘어섬에 엄청난 성공을 거둔 것이다. 대표 지역은 '홋카이도 가미시호로정'이다. 가미시호로정은 고향세로 걷은 기부금을 지역 인구를 늘리는 정책을 실시해 인구 감소세를 막아 주목을 받았다. 이외에도 마을 활성화를 위해 고향세 기부금을 교육 정책에 투입한 '오카야마현 와케정', 폐교 위기에 놓인 지역 현립고등학교를 국내외 유학생들이 모이도록 변모시킨 '나가노현 하루바촌' 등 북지, 지역·산업, 관광·교육, 환경, 안전 등 분야별로 일본의 벤치마킹 사례는 수도룩하다.
이에 발맞춰 우리 동구는 목적 없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 정착만 쫓기보다는 '인지도' '지역 경제 활성화' '상생' 세 가치를 골자로 기부자와 지자체를 위한 '윈윈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우선 자율 기부부를 유도할 수 있는 '공의 프로젝트'라는 인지도 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현행법에 따라 초기 제도 홍보와 모금 활동에 따른 제약이 있었지만 건전한 기부 문화를 형성하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출향민 기

부가 주를 이룰 것이나, 향후 '광주 동구에 기부했다니 답례품은 물론 지역 발전을 위한 기금 연계 사업 추진까지 믿을 만하다'는 인식을 기부자들이 느끼게끔 해야 한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정성이 담긴 지역 답례품 개발·발굴도 중요하지만, 이를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트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뒤따라야 한다. 지역 사랑 상품권 대신에 다양한 체험 관광을 유도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무등산국립공원, 자산유원지 등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과 주요 관광명소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다. 세계화를 일찍 새롭게 거듭난 '추억의 광주 충장 월드컵스타터빌'도 하나의 대안이다. 이를 연계해 지역민과 관광객이 상생하는 '공정 관광 생태계'가 조성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이렇듯 고향사랑기부제의 최종 목표는 '정액'이 아닌 '상생'이다. 우리보다 15년 앞서 시작한 일본도 수많은 시행착오와 난관에 부딪혔다. 오늘날 일본의 '고향세 성공 신화'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얼마의 기부금이 모였느냐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금이 모이고, 이를 연계 사업을 통해 어떻게 활용할지, 기부자와 지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 등 그 과정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고향사랑기부제는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절대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참여가 이뤄져야 성공적인 안착도 가능할 것이다.

NGO 칼럼

학업성적 관리 문제, 올해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박경형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상임활동가

갖추기도 어렵다. 다만 학업성적 관리 지침 위반 관계자를 엄벌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등 실효성 있는 성과를 거둬야 함에도, 학교법인의 징계 관행을 묵인하는 등 교육 당국이 무기력한 모습만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2018년 대동고 시험지 유출 사건은 불문경고 등 솜방망이에 그쳤고, 2019년 고려고 성적우수자 특혜 사건은 징계를 미이행하여 과태료만 납부했을 뿐, 광주시교육청이 특단의 행정·재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처럼 느슨한 지도 감독 때문인지, 광주 관내 중·고교에서 진행되는 지필 고사의 제시협은 매년 100여 건에 달하며, 평가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시교육청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2학년도 중·고교 35건(40분항) 고등학교 117건(149분항)의 제시협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시협 사유로는 시험 범위 오류, 복수 정답, 정답 없음, 문항 전제, 시험 관리 오류, 배점 부족 등 단순한 실수에서, 시험지 유출 등 중대한 사안까지 내용과 수위가 다양했다.
물론 단위 학교의 출제 여건과 여러 한계로 제시협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다만

각각의 제시협 사례를 면밀히 살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원이나 인터넷 업체에서 중·고교에서 출제된 시험지를 무단 수집한 후 판매하고 있는데, 결국 학교 시험 문제의 변별력을 갖추기 어려워 제시협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교사들이 학원과 인터넷 업체를 상대로 저작권을 다루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개별 대응만으로 업체의 행태를 뿌리 뽑긴 힘들다. 교육부나 교육청의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만, 교육 당국은 이런 상황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핑계를 대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아 시민단체가 해당 업체를 고발하기도 했다.
교육이 입시로 변질되는 상황에서 입시의 부조리는 평가의 부조리에 고스란히 대응되며, 과도한 입시 경쟁과 지나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해 지난해 사건들이 되풀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장기적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지향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대학입시 제도의 개혁이 이뤄져야 하지만, 당장은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
광주시교육청은 추락한 공교육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 조치를 하는 한편, 제시협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학교 현장을 적극 지원해 나가야 것이다.

社說

도심 주차난 부추기는 주차장 조례 손질해야

광주 지역 일부 건물주들이 앞다퉈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나서 도심 주차난 심화 우려를 낳고 있다.
광주시와 다섯 개 자치구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광주에서 철거 허가가 난 기계식 주차장은 모두 282곳에 달한다. 해당 건물주들은 2018년 개정된 광주시 주차장 조례를 근거로 철거에 나서고 있다. 개정 조례는 5년 이상 된 2단 이상 기계식 주차 장치의 경우 안전진단에서 문제가 있으면 철거가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시는 노후한 기계식 주차 장치가 최근 생산되는 차량과 규격에 맞지 않은데다 고장이 잦고 부품 수급에도 어려움 겪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반영해 조례를 개정했다.
하지만 조례에 따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하고 노면 주차장을 설치하면 법정 주차 대수를 기준의 절반으로 줄일 수 있도록 허용한 데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 광주일보 취재진이 최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한 곳을 확인한 결과 인근

주책이 이면도로는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혼잡을 빚고 있었다. 심지어 남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측은 150면에 달하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 절차를 밟고 있다. 이 주차장을 철거하면 75면으로 주차 면적이 줄게 된다. 결국 남구는 시에 주차장 조례안에 대한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다른 구청 담당자들도 곤혹스런 일장이 다. 철거 허가를 내주면 주차난을 초래하고, 허가하지 않으면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서구 관계자는 "치평동의 경우 주차난이 심각해 주차 면수를 줄이면 안 되지만 조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적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광주시 주차장 조례는 기계식 주차장 철거에 따른 풍선효과를 감안하지 않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다. 시는 주차장 조례의 한계가 현실로 드러난 만큼 서둘러 보완해야 할 것이다. 기계식 주차장 철거 기준을 강화하고 각 구의 차량 등록 대수, 주차 면수 등을 면밀히 따져 조례안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일본 사죄 없는 강제동원 해법 강행 안 된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오는 12일 국회에서 '경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는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원고인 피해자를 비롯해 각 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마지막 절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동안 일제강제동원 피해지원재단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다.
이와 관련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당일 토론회 직전 '피해자 인권,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는 비상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 측은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

절차이자 요식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해법은 일본 피고 기업에 대한 피해자들의 채권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데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와 기업은 배상 책임 선상에서 완전히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강제동원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이유로 보인다. 정부는 그들로 인해 피해자 지원재단을 통해 국내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받아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면제시키지 않고 제3자가 그와 동일한 채무를 인수하는 이른바 '병존적 채무 인수' 방안이다.
이와 관련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당일 토론회 직전 '피해자 인권, 존엄을 무시한 굴욕적인 강제동원 해법 철회'를 요구하는 비상 시국선언을 할 예정이다. 시민모임 측은 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을 발표하기 위한 형식적인 의견 수렴

無等鼓
매일매일 조금씩
인터뷰
인터뷰에서 '일력'을 고르던 중 관련 태그가 눈에 띄었다. #매일매일 조금씩. 지난해 12월 카타르 월드컵때 '중꺾마'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열풍이 불었다. 새해는 작심삼일(作心三日)을 100번 하더라도 토끼 해를 매일매일 거북이 걸음으로 조금씩 나아가라 일이다. 날로 새로워지는, 일신우일신(日新又日新)을 꿈꾼다. 오롯이 한 해를 끌고 갈 동력이라면 '중꺾마'가 아닐까.
/송기동 예향부장 song@

Table with 2 columns: 광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